

‘현금 없는 사회’ 코앞… 10명 중 9명 “카드로 소비”

〈소비자〉

연령대 낮을수록 카드소비 많아
현금은 경조사·용돈 등 ‘제한적’
유통가도 ‘현금 없는 매장’ 늘려
노년·취약계층 소외 우려 여전

“지하상가나 길거리 쇼핑을 할 때 상점에서 현금 결제를 요구하면 계좌이체를 하는 편이죠. 카드만 들고 다니지, 현금은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소비자 88.5%가 결제수단으로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장소별로 동전과 지폐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다,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은 결제수단의 주도적 지위를 넘기게 된 것이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까지 확산되면 서 스마트폰이 지갑을 대신하고 있다.

7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앰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화폐 사용’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73.1%가 ‘현금 사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현금 사용의 감소는 남성(69.8%)보다는 여성(76.4%), 그리고 20~30대 젊은 층(20대 76.4%, 30대 79.2%, 40대 68%,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스타벅스 매장.

50대 68.8%)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향후 현금 사용이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 같다’는 시각(65.6%)도 지배적이었다.

평소 주로 자주 이용하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76.1% 중복응답)와 체크/직불카드(62.6%)를 꼽았다.

현금을 이용해 결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49.1%, 중복 응답)’이었다. 그밖에 소득공제 효과가 있고(26.9%), 자신의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20.5%)는 이유로 현금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

다. 실제 현금을 사용하는 상황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주로 길거리 상점을 이용할 때(64.4%)와 경조사 비용을 낼 때(64.3%),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57.3%)와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56.4%) 현금을 사용했다. 대체로 현금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강한 장소에서 소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현금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카드 사용시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60.2%, 중복응답),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52.6%)이었다.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일일이 현금을 챙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이다.

또한, 대다수 소비자들이 ‘현금 없는 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61.3%)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38.7%)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이고(62.4% 중복응답), 사람들이 현금보다 카드를 보유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61.9%) 이유를 주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당 평균 현금 보유 규모는 7만 8000원으로 직전 조사 결과 보다 33% 감소했다. 현금 보유 감소 이유는 ‘간편 송금 등 개발로 현금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38.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간편 결제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1억 7000만 명(복수 가입)이며 간편결제 서비스 이

용건수는 23억 8000만 건에 달했다. 결제 이용액만 80조 원으로 이용건수와 금액 모두 2년 새에 3배 가까이 늘었다.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커피 전문 매장 스타벅스는 지난해부터 카드, 모바일 결제만 가능한 ‘현금 없는 매장’을 도입해 759개 까지 확대했다. 전체 매장(1280개)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한 결과, 현금 정산업무 시간이 단축됐고, 고객 대기 시간도 줄어들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유통 매장 올리브영도 지난 2월부터 10개 매장에서 ‘현금 없는 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삼성페이·LG페이·카카오페이지로만 가능하다.

페스트푸드점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 CU 등 편의점에 도입된 무인 계산기기도 신용카드·모바일 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우려의 시선 역시 존재한다. 노년 세대와 디지털 취약계층 등 특정 집단을 경제활동에서 소외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中 무역분쟁에 인프라 확대 예상”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제조업투자 부진 지속 전망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둔화한 성장세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조업 투자는 부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단기 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수요, 기업 수익성 악화, 미·중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 등을 종합해 보면 향후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대는 뚜렷해지는 반면 제조업 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축소 등 질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던 중국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전략의 궤도 수정이 일정 부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프라, 부동산개발 투자 모두 증가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 등을 감안할 때 인프라 투자 증대가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대외부문에서의 성장둔화 압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의 파급시차가 짧은 인프라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정부는 과거에도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성장률이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있었던 2008~09년 중에는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4조 위안의 자금을 투입했고, 2015~16년 경기부진 시기에는 2조 3000억 위안의 인프라 투자를 경기회복 수단으로 지출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협상타결을 통해 분쟁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복귀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제조업 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G20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에서 3250 억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유보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은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레버리지비율 상승 등 중국경제의 잠재리스크 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채리스크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재개 등에 힘입어 중국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레버리지 확대 등으로 잠재적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할 것으로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단기 성장전략은 철강 등 건설자재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겠으나 제조업 투자, 생산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면 대중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관련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89@

비 올때 中企와 함께 우산 쓰는 지방은행

1분기 중소기업 대출액 2.2조 ↑

긴급 자금·경영 컨설팅 등 지원

부실따른 리크스관리로 악영향 ↓

주요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우산 역할’을 통해 금융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 특히 지방은행은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긴급자금 제공,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선 중소기업 부실이 확산할 경우 지방은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각 은행이 부실 정도에 따라 충당금을 쌓고 있어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5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총 79조 333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77조 459억) 대비 2조 2877억 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부산은행이 23조 363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은행(22조 8272억 원), 경남은행(17조 6148억 원)이 뒤를 이었다. 광주은행은 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모두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한 셈이다.

먼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침체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제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쿠베이터(SUM Incubator)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5대 지방은행 기업대출 현황〉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2018년 1분기	중소기업	231,427	169,139	221,379	82,394
	대기업	22,293	13,672	21,117	4,459
2019년 2분기	중소기업	239,639	176,148	228,272	81,969
	대기업	26,614	14,059	23,322	5,505
					3,246

/자료=금융감독원

비즈니스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부터 밀착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역의 창업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며 “창업기업 육성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창원시와 손잡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협력자금 150억 원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협력자금의 2배인 300억 원을 대출 재원으로 조성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조선사 및 한국GM 협력업체, 소상공인, 수출기업,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대구은행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국내은행 관계형 금융 취급 실적 평가’에서 중소형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대구은행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종의 상황부담

을 줄이기 위해 9439억 원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할상 환 중이거나 분할상환 예정인 대출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영업점장이 전결로 취급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대구은행은 관계형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장기 대출과 지분투자,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담보는 부족해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에게는 지분투자 등의 기회도 주준히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 경기침체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안정적인 정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지역 기업이 경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 등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며 “업무 협약으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